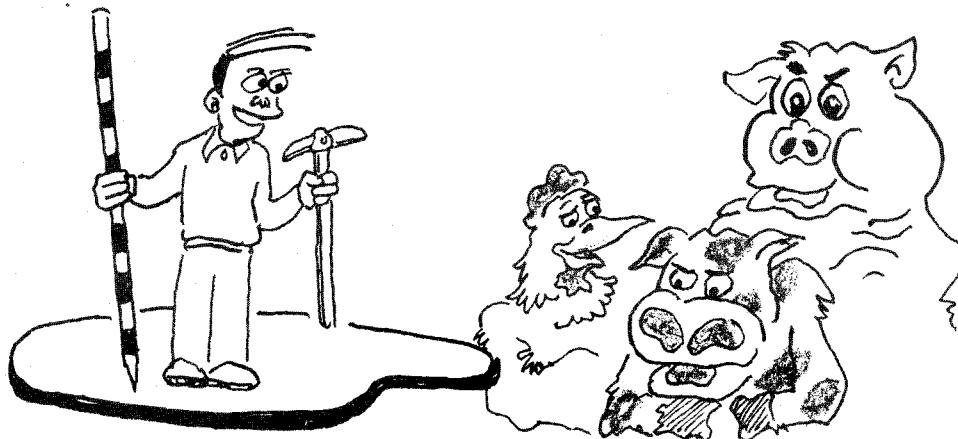


축산단지 조성 불가능한가



□ 취재 / 권동원 기자

우 루파이라운드가 농업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존재로써 인식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으며 무차별적 수입은 농업 종사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고 있다.

양계업계 역시 직접, 간접적 피해는 충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입개방 문제가 직면해 있는데도 양계업자의 관심은 분산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국제경쟁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 때문에 양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양계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표면적으로 양계를 지원, 육성하는 듯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규제 일변도의 각종 법률, 제도, 일선행정기관의 업무집행 등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을 잊게 된다.

양계업이 처한 상황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상품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축산시험장 정선부 박사는 채란 산업은 국제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기술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생산성 향상, 사양관리 성력화, 협업양계단지 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품종 선택, 육성기 제한급이, 계절사료 급여, 산란후기 사료제한급이, 모래급여 등이 있다. 사양관리 성력화를 위해 급이시설 기계화, 급수시설 개선, 자동계분제거, 사료빈 설치, 자동점등제어장치 등이 있다.

또 협업양계단지 조성으로 생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생산체계의 협업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게 된다.

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노력과 사양관리 성력화에는 양축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단 사양관리 성력화를 위한 많은 소요자금은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정부의 의무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협업단지 조성은 혼자하는 것이 아닌 여러명이 하는 공동체 모임이 필요하다.

협업으로 생산비 10~15% 절감

양계 협업단지는 이미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 각도에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포천 양미리 협업단지에서 생산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양계업자에게 천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포천 협업단지는 생산자재 구입 창구 일원화로 대량공동 구입함으로써 자재구입비의 10~15%를 절감한다. 또 생산물을 매일 수집하여 선별, 포장을 거쳐 공동으로 직접 출하함으로써 계란 개당 6원 씩을 더 받고 있으며, 공동육추로 우수한 품질의 닭을 공급 받으며, 노계도태나 강제환우 등 생산조절 유도로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소규모 사육자들이 모여 대규모 사육에서의 유리한 점을 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체계이다. 양계분야도 몇지역에서 조직되어 활발한 운영을 하면서 양계업자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협업단지는 협동조합보다 한단계 더 깊은 체계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하면서 협동조합이 하지 못하는 사업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협업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포천 뿐 아니라 협업오경농장 등 전국에 여러 곳에 있다. 이들은 일정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양계장들이 협업 형태로 운영되나 최근에는 천안양계협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아예 한 지역내에서 협업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위치가 분산된 협업 보다 한 지역에 집중된 협업이 더 효과적인 판단으로 20명의 조합원이 양계업의 이상향 협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측은 후보지의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천원군 광덕면 무학리에 4만4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천안 집단협업단지 무산 위기

그러나 작으마한 야산을 넘어 500m 이상 떨어진 엉뚱한 마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는 양계장이 들어오면 공해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마을 주민 중 몇명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천안협동조합은 환경오염문제

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협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양계를 하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한 사업이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담당 행정기관도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는 행정을 편다는 명목으로 반듯이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동의서는 법에도 없는 것을 요구 당하고 있다.

한 주민은 “혹시 바람에 닦털이라도 날라 올까봐 반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마을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힌다면 언제든지 양계장을 폐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양계장 문을 닫게 하면 피해가 클테니 아예 포기하라는 주장이며, 마을 대표들은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

정부에서 축산단지 조성해야

이번 천안양계조합 협업단지는 주민과 조합과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향후 소규모 양계업자가 가야 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협업단지 조성이 처음부터 원천봉쇄 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게 된다.

주민들은 내심 양계장 보다 공장이 입주하길 원해서 반대한다는 분석이다. 조합측도 천원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 밀려나는 선례



를 남기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무조건 반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양축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해줄 보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배출시설에 대한 일정기준이 마련되어 주민을 안심시키며, 이전을 원하는 양계장도 대안을 찾을 길이 없어 무조건 비토당하는 일을 없애주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어려웠던 농촌이 수입개방으로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농업소득 보다 농외소득을 높이는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정책이다.

농업소득의 한계를 인정하며 농촌이 살기 위해 새로운 소득을 창

출하려는 의도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현상황은 농업소득을 봉쇄하고 농외소득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갖는다.

농촌에서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소득이 더 필요할 때 농외소득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성 보다 축산단지를 먼저 조성해 가능한 농업소득을 취한 후 농공단지 조성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정부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입주업체에 각종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양계 등 축산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주고 세제, 자금지원이 따라 주어야 한다. 일본에서도 집단이 자금을 이용할 경우 개인(연 4%) 보다 더 낮은 연 2.8% 저리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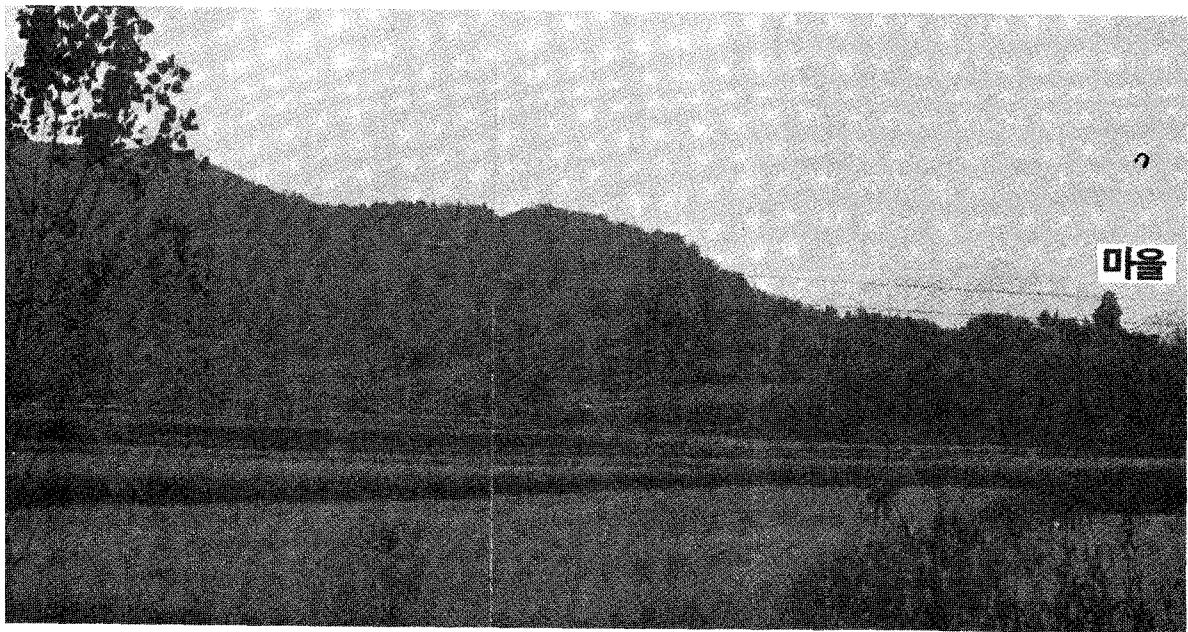
일본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면서부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정부 지원이 있었다. 지금도 많은 자금을 마련해 놓고 농민에게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란계의 경우에도 양계장을 신축할 때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이미 수입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히려 계란 수출을 위해 일본 양계업자가 한국 시장을 돌아보고 간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자가 믿고 따라준 결과가 UR 협상에서 쌀 한 품목만 가지고 느긋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우리 양계인들은 정부 보고 명석 펴달라는 실현성 없는 요구를



하지 않고, 경쟁력은 우리가 키울 테니 막지만 말아달라는 최후의 단계에 와있는 듯 하다. 물론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림수산부의 축산장기발전대책도 홀륭한 대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 실행과정에서 변질되고 현장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둔갑되고 있다.

양계업자가 쉽게 양계를 할 수 있도록

천안조합의 경우에도 주민의 반대로 다른 지역을 선택하려해도 토지구입후 7년 이내에 판매하면 부동산투기로 간주하는 전매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욱 곤욕을 치르고 있다. 또 농림수산부 농지관련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축사가 공장 등으로 변칙

활용될까봐 허가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군다”는 속담과 일치하고 있다. 진정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몇몇 몰염치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축산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양계인 스스로도 양계장을 공장으로 임대해주어 편히 살고 있다는 말을 쉽게 하고 쉽게 듣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자신의 생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에 자각해야 한다. 또 양계장은 닭똥 냄새나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해왔던 당사자 역시 양계인들이었다.

정부에서도 각자 산발적으로 흩어져 우왕좌왕하는 정책들을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정리하여 일관

된 정책, 행정을 펼치는 것이 양계인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이 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제출할 컨트리리스트에서 밝힌바대로 농축산물 중 국제가격과 가장 근접한(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차이 20%) 계란이 생산비 20%를 낮출 수 있는 협업단지 조성으로만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양계인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몇가지 사항만 관철되면 국제가격 보다 20% 저렴한 계란 생산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수입개방에 당황하지 않고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자세로의 전환이 축산을 살리는 일이다. 양계